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다시,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2022년 6월 17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6.16.(목) 오후 14시 30분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6. 15.(수)	담당부서	산업기술정책과
담당과장	이종석 과장(044-203-4510)	담 당 자	김수희 사무관(044-203-4515) 이가영 사무관(044-203-4514)

민간주도·성과중심으로 산업기술 R&D 대수술

- 산업부 장관, 「제1차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」 개최 -
- "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" 발표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**은 **6.16일(목)** 대한상공회의소에서 「**제1차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**」을 개최

○ 同 회의체는 국가R&D 110조 시대에, 민간부문의 기술혁신을 담당하는 **반도체·이차전지·로봇·모빌리티 등 주요 산업 CTO의 의견을 청취**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

< 「제1차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」 개요 >

○ **(일시/장소)** 6.16(목) 14:30~16:00 / 대한상공회의소 1층 EC룸

○ **(참석자)** 산업부 장관 및 주요 산업별 CTO 등 15여명

- (산업부) 장관, 산업혁신성장실장, 산업기술융합정책관, 산업기술정책과장
- (기업) 삼성디스플레이, 네이버(AI.플랫폼), SK이노베이션(에너지), KAI(항공우주) 현대자동차, LG에너지솔루션(이차전지), POSCO, DN솔루션(기계), 유진로봇, 주성엔지니어링(반도체), 파노로스바이오

○ **(논의내용)** 기업혁신을 지원하는 산업기술 R&D 혁신전략

○ 산업부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역동적 경제 구현을 위한 "**새 정부의 산업기술 혁신전략**"**을 발표**하고, CTO들과 **산업기술 혁신전략 및 제도개선** 필요 사항 등을 논의하였음

□ “**새 정부의 산업기술 혁신전략**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

① 첫째, 높은 리스크로 민간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**향후 5년간 10개의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** (Mega Impact) **프로젝트***를 **추진**하기로 함

* 경제·사회적 난제 해결(예 : K-반도체, 수소경제, 미래 모빌리티 등)을 목표로 기술 개발·제도개선·기반구축·사업화를 포괄하는 복합 사업

- R&D의 궁극적 목표인 사업화를 위해 **기획 단계부터 특허・표준・규제 등을 先 분석해 과제기획에 반영**하고, **기술창업 등 사업화에 투자하는 산업기술 혁신펀드를 향후 3년간 1조원 규모**로 조성

② 둘째, 기존 선진국 추격형(fast follower)에서 벗어나 선도형(first mover)로 전환하기 위해 **파괴적 혁신**(Disruptive&drastic innovation) **R&D 사업***을 신설하여 **새로운 시각과 방식의 신제품・서비스 개발을 지원**할 계획

* 최고전문가 그룹이 신기술.신제품 개발 과제를 기획하고(Pre-R&D), 세부 기술개발은 본 R&D를 통해 추진

- 아울러,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**알키미스트 프로젝트**도 올해 3개의 신규테마(노화 역전, 초실감 메타버스 시각화 등)를 시작으로 총 12개의 테마를 선정해 **경쟁형 방식**으로 ’31년까지 총 **4,142억원을 지원**

* (1단계) 개념연구(2억원/1년) → (2단계) 선행연구(5억원/1년) → (3단계) 본연구(연 40억원/5년) 의 3단계 경쟁형 방식을 활용

③ 셋째, 산업기술 R&D를 통한 인적·물적 자산의 체계적 축적과 활용을 위해 **산업기술 가치사슬 플랫폼인 TVC**(Tech Value Chain)를 새롭게 구축하고, R&D 성과물에 대한 분석・환류 시스템을 고도화

④ 넷째, 민간기업의 **R&D 수행과정 상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해소**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**R&D 예비타당성조사 규모를 현행 500억원에서 1,000억원으로 확대 개편**하고, 전략과 기획 중심으로 산업기술 지원기관(전략기획단, 산업기술진흥원, 산업기술평가관리원) 체계를 전면 개편

- **기업 당 동시수행 과제 수**(중소 3개, 중견 5개)**를 전면 폐지**하고, 매출 3천억원 미만의 **초기 중견기업의 R&D 자기부담률은 현행 총사업비 50%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33%로 하향 조정**

- 신규 기술개발 과제에만 한정되었던 **R&D 자율성 트랙**(연구목표 변경·사업비 정산 등 연구 자율성을 부여) 적용대상을 계속과제, 기반구축 과제까지 확대하고 사업화 매출 우수기업의 기술료를 감면하는 등, **R&D 프로세스 전반의 과감한 규제혁파**과 **인센티브 확대를 병행**

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내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현재 2% 수준인 **국제 공동 R&D 과제**(해외기관 참여 과제)는 **'25년 15%까지 확대**

⑥ 끝으로, 이러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기업과 지원기관·정부 간 **역동적인 기술혁신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R&D 제도 개선 및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등 산업기술 R&D 시스템을 고도화**

□ **참여기업들은**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태계 구축이나 플랫폼 없이 **독립적인 하드웨어 제품 개발만으로 산업을 이끌어가는 것은 불가능**한 만큼,

○ 설비·공정 개발을 위한 **대규모 국가 R&D 지원 확대**, 연구기관 간 **유사과제 통합 등** 정부가 **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적극 조성해 줄 것**을 **건의**

□ 이 장관은 "금번 라운드테이블은 정부가 핵심 업계의 CTO들과 함께 뜻을 모아 **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혁신 방향 및 협력체계를 논의했다는 점에 의의**가 있다"며,

○ "정부는 앞으로도 기업 주도 역동적 기술혁신을 위해, 업계와의 **긴밀한 소통과 협력**을 통해 **혁신전략의 신속한 이행**과 **대규모 지원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**"이라고 밝힘

○ 산업부는 **「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」을 분기별 1회로 정례화**하여 **기술현장과 산업기술 혁신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**하고, **2차 회의**부터는 **지식재산, 기술사업화 등 보다 광범위한 기술 혁신 이슈**에 대해 **논의할 예정**

※ (별첨) 새 정부의 산업기술 혁신전략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이가영 사무관(☎ 044-203-451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